다산포럼

퇴계와 고봉의 이학(理學) 논쟁과 호남학

곽 진
상지대 명예교수

조선조 학술사, 유학의 심화와 발전에는 서한 토론, 즉 문목(問目) 토론이 자리 잡고 있다. 안동의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광주의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두 분이 벌인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이 그 대표적 사례 같다.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發)하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發)한 것"이라고 주장한 퇴계의 주장을 거의 25년 아래 제자인 고봉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이(理)와 기(氣)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맙니다'라고 되받는다. 퇴계는 "어린 애송이가 감히 스승에게 딴지 거나"라고 언짢게 여기지 않고 고봉의 반론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다. 때로는 격론하고 때로는 하소연하듯 서로를 설득하고 논쟁하다 퇴계는 고봉의 견해를 일부 반영해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그것에 따른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탄 것"으로 학설을 수정했다. 두 분의 앞 선배들도 토론을 꺼린 건 아니지만 이들처럼 자신의 주장을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당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두 분이 주고받은 서한이 지식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입에 오르내리면서 학술 토론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 시대 학인들이 저마다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쟁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 세대 아래인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우계(牛溪) 성혼(成渾)도 두 분의 토론문을 읽고 서로의 견해를 밝히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주장을 다져 나갔다.

16세기 호남은 그야말로 인물의 저수지였다. 태인의 이항(李恒), 광주의 고경명(高敬命), 박상(朴詳), 박순(朴淳), 양자징(梁子渟), 김성원(金成遠), 기대승(奇大升), 장성의 김인후(金麟厚), 담양의 송순(宋純), 박수량(朴守良) 등등이 그들이다.

유교를 나라의 학문으로 삼은 조선에서 지역의 학문적 성쇠를 평가하는 일이 쉬울 리 없겠지만, 중세 이후 호남의 이학(理學) 연구 열기가 영남보다 식어 보이는 까닭이 무엇일까?

당시 호남의 학문을 선도했던 인물들의 단명과 벼슬길에 대한 환멸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인후(1510-1560)가 51세에, 기대승(1527-1572)이 46세에 세상을 떠난 일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두 분의 단명이 호남 학문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 건 부정하기 어려울 거 같다.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화에 식상한 인물들의 낙향을 꼽는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누정(樓亭)들을 세우고 자연과 벗하며 어울리는 데 담양 소쇄원이 그 중심지였다. 시사(時事)를 걱정하고 고금의 학문을 논하는 모임으로 이를 계산풍류(溪山風流)라 부른다. 일종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낭만적인 문화가 꽃피게 되었고 후대 호남 문화의 한 줄기를 형성했다.

한 세대 후인 17세기 임영(林泳), 양득중(梁得中), 임상덕(林象德) 등이 나와 경기의 이단상(李端相), 박세채(朴世采), 그리고 논산의 윤증(尹拯) 등과 사승(師承)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소통·토의하면서 학맥을 이어간다. 여기서 문예적 감성이 가득한 계산풍류 그룹과 성리학 연구를 본업으로 삼은 정통 유학 그룹이 생겼다. 계산풍류의 이를테면 문예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기질은 조선 후기 호남 실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후기에는 경기 가평의 이항로(李恒老)와 학문적 성향이 유사한 기정진(奇正鎭)과 그 손자인 기우만(奇宇萬)이 출현하여 학문적 견해가 다른 학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계승했고 전주에서는 전우(田愚)가 전통 유학을 굳게 지키며 강학 활동을 펼쳐 나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학술의 심화 발전에는 어떤 주장이든 그 시대의 권력자나 권위자의 말씀이 그대로 정설(定說)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판과 반 비판의 격론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아쉽게도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학술 논쟁이 각 학맥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여 학문적 순수성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우리 학술 연구의 전통은 자기 견해를 논증으로 입증하는 토론 문화이었음은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성리학 일변도의 딱딱한 학문 분위기와 달리 무등산 주변인 담양의 누정을 중심으로 만개한 호남의 문예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이 호남 실학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중국의 군 개혁의 내용과 과제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일찍이 마오쩌뚱(毛澤東)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노동자 농민 중심의 홍군(紅軍)을 이끌어왔다. 홍군은 공산당 소속의 군대로 국민당군과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면에서 자신들이 신중국을 수립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당 소속의 군대이면서 국가의 주권과 방위를 담당하는 국방군이라는 두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군 통수권과 군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ttee)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총서기, 국가 주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195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으로 국가의 군대라는 형식도 갖출 필요가 있어 1982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전군을 통솔하고 인사를 통해 컨트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동일한 멤버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다.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조직에 간판을 두 개 걸어 놓은 셈이다.

집권 2기에 들어선 2018년 시진핑 주석은 1월 1일을 기해 무장 경찰부대를 중앙군사위원회 관할로 편입했다. 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 등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봄에 열린 전인대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19대 정치보고에서 '군대 강화와 국방 현대화 전면 추진'과 '강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난다.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해 "2020년까지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2025년까지 현대화 군대를 건설하며,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다"고 추상적이지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통합 작전 기구 창설'을 통한 정보전자 기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통합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군 개혁을 간결하게 '군종주건, 군위관총, 전구주전'이라 표현한다. 군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보전에서 승리하는 군 건설, 통합 작전 지휘체제를 위한 획기적 개혁,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함과 동시에 제 2포병을 포함한 각 군종을 통합 부대로 재편, '수량·규모 중시에서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군 현대화 추진, 병력 30만 명 삭감 등이 제시되었다. 또 전문 군인 육성과 실전 훈련, 군사 예산 및 후방 부문 관리 등도 군 개혁의 중요 내용이다.

군 개혁의 실제적인 조치로 1단계에서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전략 핵미사일은 물론 우주 공간을 포함한 정보 활동과 사이버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로켓군 전략 지원 부대의 신설 등과 같은 군종주건(軍種主建: 군종 사령관이 군사력의 정비와 건설을 주관)을 실시했다. 2단계로 이전의 기구들을 개편하여 총참모부를 대신하는 통합참모부의 신설, 회계 감사 부문의 독립적 기능 격상 등과 같은 군위관총(軍委管總: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감독)을 실시했다. 통합참보부는 전략 지원 부대로 어떤 이들은 미국의 CIA, NSA, NASA를 합쳐 놓은 성격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3단계로 지방 정부와 결부하여 지역 방위 개념이 강했던 7대 군구(軍區)를 해체하고 실전력 강화와 통합작전에 필요한 통합부대 중심의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는 전구주전(戰區主戰: 전구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을 실시했다.

이러한 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해방군은 여전히 국가의 군대냐, 당의 군이냐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현대전, 정보전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격화되는 진영 대립적 국제 정세에서 공산당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해공군력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평가받는 해방군이 진영 갈등이 더욱 거세져 가는 정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막강한 권력 기구가 된 해방군이 독특한 건군 과정과 전통적 안보관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국가의 무장력에 대한 통수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당 통치 체제에서 '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 해방군의 통수권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군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산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군 개혁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기 고

국민 의식 개조 운동을 전개하자

김 용 하
시인
전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요새 거리에 나가보면 온갖 살벌한 정치적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지나다니는 차량에도 각기 자기 조직이나 이익을 위한 구호가 도배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또한 SNS상이나 각종 단톡방에도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원색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초유의 야당대표 기소와 재판으로 인한 당파 간의 극한적 대립, 매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 각종 대형 수사와 폭로성 발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대일 관계 해법에 따른 대립 등으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연합 군사훈련이 일촉즉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북중러 연합과 한미일의 대응 등 신냉전 체제의 부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적인 경제의 침체 등으로 난마같이 얽히고설킨 국내외의 혼돈과 갈등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국민은 사분오열되어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권이 극심한 음해와 대립으로 의정은 마비되고, 모두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온갖 유언비어와 혹세무민, 교언영색이 판을 치고, 파벌과 집단의 이익 이외에 국민의 삶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극한적인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 소위 확증편향과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팬덤 정치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어, 국민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무기력해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바른말로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각계의 원로들이 있어 방향타가 되어주고, 희망과 위로를 주기도 했다. 요새는 모든 문제를 법에 의해 해결하려 하면서 각종 고소 고발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도 불복하고 시위를 하거나 선동하는 반민주적인 성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민주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거대 담론이나 정치 쟁론은 그 원초적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몰각하고, 단순히 자기들의 편향된 논리에 따라 이용하거나, 맹목적인 감정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그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지난날의 역사를 반추하여 교훈을 얻고, 주체성 없이 남을 추종하고, 감성적으로 부화뇌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냉철한 역사의식과 처한 현실을 논리적 근거와 합리의 바탕에서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 종교의 지도층이 떨쳐 나서서 이념이나 지역, 당쟁에 구속되지 않는 바른 방향을 선도하고, 정책 제시를 통한 일대 국민 의식 개조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시대에 맞는 올바른 인간적 삶의 가치, 도덕적 정체성의 확보, 물질에 우선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 속에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민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투철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개혁적인 사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사회의 혁신과 개인 삶의 방식의 변혁을 갈구하고 확산시키는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 존중, 철저한 법과 규칙의 준수, 비리와 부조리의 단절, 역할에 따른 책무의 이행 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일대 혁명적 시민 의식 개조 운동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갈등 비용을 줄이고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社 說

지자체들 상식 벗어난 '일방 행정' 우려스럽다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에 기대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영광군은 최근 영광 열병합발전소측에 '발전소 매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니 의향을 적극 검토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 의향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 '고형 연료 제품(SRF)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영광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해 더 이상 발전소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급기야 영광군은 발전소 측에 보낸 공문에서 '법원이 우리 군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군민 우려는 계속되고 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군민 감정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전소 매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발전소를 사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안군 역시 2019년부터 국가 기반 시설인 군 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 군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반대 여론 형성에만 주력해 논란을 빚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조직을 지원하는데 5년간 예산 28억 원을 수립·집행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고려하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펴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영광·무안군 사례는 재정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주민 공감대나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주관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정책적 판단은 공익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를 가질 때만 타당성을 얻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과 재정을 낭비하는 블랙홀이자 지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집단 탈주…구멍 뚫린 피의자 관리

불법 도박을 하다 붙잡힌 외국인 열 명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비좁은 창문 틈으로 집단 탈주했다. 경찰의 허술한 감시로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전 6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23명 중 열 명이 도주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월곡동의 단독 주택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23명 모두를 월곡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공간이 넓은 회의실에 머물게 하면서 한 명씩 불러 신원과 도박 방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데 한 시간쯤 지나 회의실에 있어야 할 인원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린 경찰은 이들 중 절반가량이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회의실에는 바깥으로 밀면 15㎝ 남짓 벌어지는 공기 순환용 창문이 있는데,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창틈으로 몸을 빼내는 데 성공하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지구대에는 직원 일곱 명과 지원을 나온 기동대 다섯 명이 투입돼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의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제에 잘 따르자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회의실 안에 감시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탈주범 열 명 가운데 어제까지 일곱 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다.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이번 집단 탈주 사건은 일선 경찰관들의 안일한 피의자 관리에서 비롯했다. 감시 카메라도 없는 회의실에 피의자들을 모아 놓고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말해 준다. 광산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는 지난해에도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수적이다.

無 等 鼓

후쿠시마 오염수

지난 1995년 7월 23일 14만t급 유조선 '씨 프린스호'가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암초에 좌초했다. 구멍 뚫린 선체에서 원유와 벙커C유가 흘러나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사고 이후 취재를 위해 해경 함정과 어선을 갈아타며 어렵사리 찾아간 기름 유출 피해 현장은 참혹했다. 안도 몽돌해변 등 인근 바다는 온통 시꺼먼 기름으로 뒤범벅돼 있었다. 짙푸른 바다 빛깔과 찐득이는 검은 기름 덩어리가 대조를 이뤘다. 해상 가두리 양식 어류들도 모조리 배를 뒤집은 채 집단 폐사해 버렸다. 해변이나 해상에서 개 닦기 작업과 방제 작업에 나선 어민들의 가슴 또한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기름띠는 해류를 타고 고흥, 거제 근해로 흘러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2주에 걸쳐 오염수 방출 설비의 작동을 살핀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하며 28년 전 여수 바다에서 벌어진 해양 오염 사고 기억을 떠올렸다. 물론 기름에 의한 바다 오염과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애당초 비교 불가일 것이다. 전자는 시간이 흐르면 인위적인 방제와 자연 정화에 따라 그나마 원상 회복을 기대하지만 후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7월부터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한다고 하지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법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사실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관련 질의에서 "세슘은 물보다 무거워 가라앉는다. 그런 것(우럭)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천일염을 미리 사두는 등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의 본격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막아야 할 것이다. 청정한 바다는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